

DMB 도입 위한 방송법 개정안 연기

정치에 발목잡혀 방송법 개정안 사실상 무산 ... 업계 피해 예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내 마지막 상임위 전체회의가 가능한 25일 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해 방송법 개정이 불가능해져 이번 회기 내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이달 발사 예정이던 DMB용 위성은 공회전이 불가피해졌고, DMB 관련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게됐다.

글 / 권경희 기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으나 문광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방송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 근거법안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은 관련부처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최근 기본적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문광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원내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여야 3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합의 못 봐

이번 방송법이 회기 안에 처리되기까지는 문광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결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24일 현재까지도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두고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도입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합의해준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제1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여야 3당이

좀처럼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3당 간사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 막판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 문광위에 상정된 제반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김성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는 3당 간사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내 마지막 상임위 전체회의가 가능한 25일 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해 방송법 개정이 불가능해졌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측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송법 의결에 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회의 개최도 합의할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25일 상임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의원 의견 팽팽

고홍길 의원(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은 3당 간사간 합의만 있으면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당연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당초 취지대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을 타 방송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업계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의결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심재권 의원(문광위 민주당 간사)측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표결로 이 법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흥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이제 공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넘어갔다”면서 “두 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우선 처리해주지 않으면 절대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를 두고 관계자들은 오는 3월 한차례의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하고 있다. 한나라당

과 민주당이 서청원 의원(한나라당)과 한화갑 의원(민주당)의 구속을 막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국회 안팎에서 술술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유용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3월 임시국회를 열 경우 ‘방탄국회’ 라는 여론의 비판이 부담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처리가 미뤄진 400여개의 민생 법안 처리가 국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3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문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문광위 방송법 공청회 주요 발언

“DMB개발에 ‘올인’ … 조속 통과를”

위성 및 지상파 DMB 도입의 최대 걸림돌인 방송법 개정과 관련,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조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각론에 임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주의주장의 색깔을 달리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내용이다.

▲ YTN 박윤순 전략기획국장=YTN은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이번 법안이 빨리 통과돼 DMB 사업이 투명한 사업 일정과 준비 작업을 통해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DMB는 국가 산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방송법에 반영해 제도화되지 않으면, 관련 제도 미비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클 것이다. 다만 대기업 참여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법 개정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

▲ 넷앤티비 박재홍 사장=DMB 기술개발 업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재검토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방송법 통과 후 방송위와 정통부가 융통성 발

휘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DMB 기술과 제품 개발에 ‘올인’ 한 상태다. 만약 제도 미비로 DMB사업이 지연되면 삼시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10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휴대폰과 셋톱박스 업체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어렵다.

▲ SBS 박희철 기획본부 정책팀장=디지털 방송 시대에 DMB는 꼭 필요한 서비스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를 중심으로 상당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업체들 간 이견이 해소됐으며 이제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한 단계다. 원래 예정된 DMB 서비스의 로드맵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TU미디어컴 배준동 상무=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TU미디어의 손실뿐만 아니라 70여개에 달하는 관련 제조업체들과 100여 개 이상의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이 경영상의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와 휴대폰에 이어 또 다른 성장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96년 CDMA를 채택, 지난해에만 세계 시장에서

130억 달러를 획득한 것처럼 DMB가 수출효과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 바란다.

▲ MBC 유기철 DMB 추진단장=DMB의 경우 DTV 전송방식과 연계되어 막판에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DMB 도입이 시대적 추세이며 대세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 KT 장기승 차세대통신사업자 DMB팀장=일부 부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고용창출과 산업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회기 내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

▲ KT 장기승 차세대통신사업자 DMB팀장=일부 부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고용창출과 산업 효과 등을 고려해 이번 회기 내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한다.

▲ KBS 정초영 DMB 추진단장=이번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은 수돗물과 생수에 비교할 수 있다. 국민들이 생수를 선호한다고 해서 수돗물을 공급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영방송도 지상파 DMB와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